2020년 경찰승진 행정학 기출

해설 : 이승철

01 정부가 민간위탁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업무는?

2020 경찰승진

① 시민의 의식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
②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해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민간위탁이 제한되는 영역

㉠ 주민의 권리·의무 및 의식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
㉡ 위탁시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공공성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무
㉢ 국가의 검증, 시험연구,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
㉣ 위탁관리 시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사무
㉤ 법적 근거 등 합리적 사유가 없는 사회 공익서비스 분야의 사무

답 ①

02 정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정부규제를 포지티브(positive) 규제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구분할 경우,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에 비해 규제대상 기관의 자율성이 크다.
② 규제개혁은 규제관리 ⇨ 규제완화 ⇨ 규제품질관리 등의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규제의 역설은 최고의 기술을 요구하는 규제가 오히려 기술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본다.
④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 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다.

해설

① (×) 포지티브(positive) 규제는 허용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를 모두 금지시키는 규제인 반면,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금지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규제이므로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에 비해 규제대상기관의 자율성이 작다.

■ 규제의 개입 범위 :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

구분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특징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사전규제 예 주로 허가제·인가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사후규제 예 주로 신고제·등록제
법 규정 형식	~할 수 있다. ~이다. – 허용 사항 명시 (특정 행위만 허용, 나머지는 금지)	~할 수 없다. ~가 아니다. – 금지 사항 명시 (특정 행위만 금지, 나머지는 허용)
입증책임	피규제자가 규제법규 준수를 입증	규제기관이 규제법규 위반을 입증
효과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제약됨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보장됨

② (×) 규제개혁의 단계(OECD. 1998) : **규제완화**(deregulation : 규제비용과 건수의 감소) ⇨ **규제품질관리**(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 개별규제의 질) ⇨ **규제관리**(regulatory management : 전반적 규제체계의 정합성)

③ (○) 규제의 역설에 대한 사례에 해당한다.

• 규제의 역설(regulatory paradox) : 규제가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의도와는 달리 반대의 효과가 발생하는 현상.

㉠ **과도한 규제는 과소한 규제가 된다.** 예 오염 없는 세상을 위한 고도의 규제 ⇨ 한정된 집행자원으로 규제 불가
㉡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의 전체 위험 수준은 증가한다.** 예 새 차에 대한 환경규제·안전규제 강화 ⇨ 새 차 가격 상승 ⇨ 헌 차 이용 ⇨ 환경오염 증가
㉢ **최고의 기술을 요구하는 규제는 기술 개발을 지연시킨다.** 예 현 시점에서 최고 기술을 가진 기업의 시장 독점 초래 ⇨ 경쟁기업 소멸 ⇨ 신기술 개발 저해
㉣ **소득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예 최저임금제 도입 ⇨ 무능한 사람들, 즉 최저임금제로 보호하려 했던 사람들의 해고
㉤ **상품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할수록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정보량은 줄어든다.** 예 제품정보 공개 의무화 ⇨ 기업의 광고 인센티브 감소(공개해야 하는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 시장에서 제품 정보의 감소로 인한 소비자의 판단 근거 축소.

④ (×) 우리나라 규제개혁업무의 2원화 : 행정규제기본법상 대통령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 국무조정실

•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 · 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 · 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답 ③

03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정부실패의 원인 중 권력의 편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정부보조 삭감, 규제완화 등이 있다.
②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역할은 공적공급, 공적유도, 정부 규제 등이다.
③ 정부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사적 목표의 설정,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등이다.
④ 시장실패의 원인 중 정보의 비대칭상황에서 정부는 일반적으로 공적유도, 정부규제를 통해 대응한다.

해설

① (×) 권력의 편재에 대한 대응방안은 민영화나 규제완화이며 정부보조 삭감은 아님.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방식 *연결 틀린 것 구별법 : ㉮이㉰㉱ ㉲㉳ 태㉱㉰이

구 분	민영화	정부보조 삭감	규제완화
사적 목표 설정(행정조직의 내부성)	○(관료이익 추구 제거)		
X-비효율, 비용체증(비용≠수익)	○(민간기업은 효율성 확보)	○(비효율적 보조금 삭각)	○(규제에 따른 비용 감소)
파생적 외부효과		○(불명확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	○(규제로 인한 부작용 방지)
권력의 편재	○(독점적 권력에 따른 특혜 방지)		○(규제를 통한 특혜제공 방지)

시장실패 원인별 대응방식

구 분	공적 공급(조직)	공적 유도(유인, 보조금)	정부규제(권위)
불완전경쟁(독과점)			○(독과점규제, 경쟁 촉진)
자연독점(요금재)	○(공기업 설립을 통한 공급)		○(공기업에 대한 가격통제)
정보의 비대칭성		○(제품정보 제공시 유인 제공)	○(제품정보 공개 의무화)
외부효과의 발생		○(외부경제)	○(외부비경제)
공공재의 존재	○(공급비용은 조세수입으로 충당)		

답 ①

04 행정학의 주요이론과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신행정론은 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행정학의 실천성과 적실성, 가치문제를 강조하였다.
② 행태주의는 행태의 규칙성과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며, 가치와 사실을 통합하고 가치중립성을 지양한다.
③ 체제론에 따르면 체제의 변화나 성장은 기존의 균형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고,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에 변화가 생기거나 새로운 이질적 요소가 투입될 때 발생한다고 본다.
④ 뉴거버넌스론에서는 공공참여자의 활발한 의사소통, 수평적 합의, 네트워크 촉매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하였다.

해설

① (○) 신행정론은 가치중립적·현상유지적·보수적인 행태론과 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행정학은 현실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치·규범·정책·철학·도덕지향의 학문이어야 한다고 보고 행정학의 실천성과 적실성, 가치문제를 강조하였다.
② (×) 행태주의는 인간행태의 규칙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며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하여 검증 불가능한 가치와 검증 가능한 사실을 '분리'시키고 '사실'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강조하므로 가치중립성을 '지향'한다. 가치와 사실의 통합적 연구는 행태주의를 비판하고 대두된 탈행태주의의 주장이다.
③ (○) 체제이론에 따르면 체제는 유기체로서 자기 고유의 속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자기 유지에 혼란을 주는 요소가 들어오면 이것을 균형화시킴으로써 본래의 자기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체제의 속성을 항상성(homeostasis)이라고 한다. 따라서 체제의 변화나 성장은 기존의 균형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에 변화가 생기거나 새로운 이질적 요소가 투입될 때 일어난다고 본다.
④ (○) 뉴거버넌스는 공적 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 생산·분배에 있어서 기존의 정부(계층제)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계층제)·시장·시민 간 자율적·협력적·상호의존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서비스연계망)를 의미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정부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정부의 공식적인 권한·명령·통제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고, 정부는 네트워크 촉매자로서 역할(방향키 기능)을 한다.

답 ②

05 공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공익의 실체설은 엘리트주의의 관점을 취하는 반면, 공익의 과정설은 다원주의의 관점을 취한다.
② 공익의 과정설은 대립적인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③ 공익의 과정설은 정부와 공무원의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중시한다.
④ 플라톤(Platon)과 루소(Rousseau)는 공익을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본다.

해설

② (×) 과정설은 사익 간 경쟁·대립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익이 도출된다고 보므로 대립적인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반면, 실체설은 사익의 이익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의 공익이 별개로 존재한다고 보므로 대립적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 플라톤, 루소, 아리스토텔레스, 헤겔, 칸트 등은 공익의 실체설과 관련되며 공익의 선험성(사익에 앞서 공익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답 ②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 비교

학설	실체설·규범설·적극설	과정설·소극설
공익 개념	**선험적(先驗的) 개념**(공익이 먼저 존재). **일원적·실체적·적극적 개념** 도덕적 절대가치, 공유하는 이익	**경험적(經驗的) 개념. 다원적·과정적·소극적·가변적 개념.** 다수 이익 간 조정·타협의 산물, 적법절차 준수, 절차적 합리성 중시
공익과 사익	**공익은 사익과 본질적·질적 차이가 있음** **사익을 초월한 공익의 존재(Σ사익 ≠ 공익)** -사익은 공익으로 전환 불가 -정의, 도덕, 양심, 일반의사 등 실체적·도덕적 개념	**공익은 사익과 상대적·양적 차이만 있음** **사익이 고려되지 않는 공익은 없음** -사익을 공익으로 전환 가능. 공익 개념의 가변성(내용·기준 없음) -공익은 사익의 총합 또는 사익 간 타협·조정의 결과
	공익과 사익을 명확하게 구분 사익보다 공익이 중요, 공익과 사익 간 **갈등 없음**	공익과 사익의 명확한 구분 곤란 공익과 사익은 **갈등관계에 있음**
사회체제	투입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개도국	다원화된 선진국
사상	**전체주의·집단주의(참여 무시)**	**현실주의, 개인주의(참여 중시), 다원주의**
공익 결정자	공익의 실체를 규정하는 행정인(소수 엘리트)의 **적극적 역할** 국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정의 목민적(牧民的) 역할	행정인은 **소극적 역할**만 담당(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적극적 역할) 국민주권주의에 의한 행정의 중립적 조정자 역할
이념	능률성·전문성 강조	민주성 강조
정책 과정	국방·외교정책과 관련(소수 전문가의 판단)	교육·복지정책과 관련(다수의 참여와 조정)
	국가주의(statism), 정책결정의 **합리모형·엘리트론** 투입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개도국	정책결정의 **점증모형·다원주의** 투입기능이 활발하고 다원화된 선진국
관련학자	플라톤(Plato),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루소(J. Rousseau), 헤겔(G. Hegel), 칸트(I. Kant), 마르크스(K. Marx), 롤스(J. Rawls), 리프먼(W. Lippmann), 벤디트(A. Benditt), 헬드(V. Held), 플래스맨(R. Flathman), 카시넬리(C. Cassinelli) 등	홉스(T. Hobbes), 흄(D. Hume), 벤담(J. Bentham), 베르그송(H. Bergson), 새뮤얼슨(P. Samuelson), 트루먼(D. Truman), 벤틀리(A. Bentley), 달(R. Dahl), 린드블룸(C. Lindblom), 소라우프(F. Sorauf), 리틀(D. Little), 애로(K. Arrow), 헤링(P. Herring), 슈버트(G. Schubert), 하몬(M. Harmon), 키(V. Key) 등
한계	① 단일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나 인간의 규범적 가치관에 따라 공익관이 달라지므로, 통일적 공익관 도출 곤란. ② 공익개념이 추상적이며 객관성·구체성 결여. ③ 이념적 경직성이 강해 공익 개념 해석에 융통성이 부족하며 국민 개개인의 주장이나 이익을 무시할 수 있음. ④ 소수 관료의 주관적 가치에 의해 공익 내용이 결정될 경우 비민주적 결정 초래(전체주의·권위주의 체제)	① 대립적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 행정인의 가치판단 기능을 소홀히 여김. ② 도덕적·규범적 요인, 국가이익·공동이익의 존재를 경시. ③ 특수이익 간 경합·대립이 자동적으로 공익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기계적 관념. ④ 토의·협상·경쟁과정이 발달되지 못한 신생국에서는 적용 곤란. ⑤ 조직화되지 못한 일반시민이나 잠재집단 및 약자의 이익 반영이 곤란함(활동적 소수의 이익만 반영). ⑥ 대립된 이익이 조정된 결과가 특수이익을 반영한 것이어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음.

06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대표적인 학자들 중에는 뷰캐넌(Buchanan), 오스트롬(Ostrom), 니스카넨(Niskanen)이 있다.
② 개인이 아닌 공공조직을 분석의 기초단위로 채택함으로써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반대한다.
③ 정보의 수준에 따라 개인의 결정행위가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④ 연역적 설명방식을 취함으로써 사물에 관한 추론방법을 이용하는데 유용하다.

해설

② (×) 공공선택론은 거시적 설명보다는 <u>개인의 행동을 기본적 분석단위로 하여 정치·경제 및 행정현상을 분석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취한다</u>. 의사결정 주체는 개인이지, 집단 그 자체는 선택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부·행정기관·조직 등은 결정의 주체가 아니고 그 구성원인 개인만이 실제의 결정자라고 본다.

③ (○)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개인(관료, 시민, 정치인)은 모두 합리모형에서와 같은 전지전능인이며 민간부문에서와 같이 공공부문의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자기이익을 극대화시키려 한다고 가정한다. 즉 정치인은 득표의 극대화, 시민은 개인적 효용의 극대화, 관료는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다만 타인들의 존재를 전제로 한 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따라서 개인들은 공공재를 최소의 비용으로 향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개선에는 개인들이 자발적인 근무의욕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며 동시에 공익 추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관료도 이제 더 이상 윤리적인 판단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며 <u>개인들은 정보의 수준에 따라 해결책을 달리하는 등 대단히 합리적으로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u>하고자 한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서 개인들은 일정한 법과 질서에 따라 행동한다고 보고 있다.

④ (○) 인간의 합리적 경제인관에 기초하여 논리적으로 엄밀한 이론을 전개한 후,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가설을 현실 자료에 비추어 검증하는 연역적 설명방식을 취한다(현실의 단순화[수학적 공식] ⇨ 구체적 해법 도출)

답 ②

07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에 기반한 제도적 동형화 과정의 결과물로 본다.
② 경로의존성 연구는 행위자, 제도 및 조직 간의 질서를 중시하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비롯되었다.
③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가 형성되는데 거래비용접근법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④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문화가 제도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해설

① (×) •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사회적으로 정당(적절)하다고 인정받는 구조와 기능을 닮아가는 과정(동형화)의 결과물로 본다.
•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은 합리적 선택 신제도론의 특징이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론에 따르면 행위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고정된 선호나 기호의 집합을 지니며, 개인은 이러한 선호의 성취를 극대화(효용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략적·계산적인 행동을 취한다. 행위자의 행태는 비개인적·역사적 힘이 아니라, 전략적 계산에 의해 이끌림.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제도를 변화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클 경우 제도는 균형상태에 놓인다. 제도나 균형상태의 변화는 개인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며, 각 개인이 경험하는 편익이 비용(특히, 거래비용)보다 커야 제도가 변화할 수 있다(비용·편익분석).

② (×) • 경로의존성은 제도를 문화의 산물로 보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도 제시하지만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는 지속성을 가지며, 그 결과 한 국가제도의 역사발전은 일정한 경로를 가지며, 새로운 투입이 발생해도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선택을 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제도가 개인이나 정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지고 진화하여 온 경로와 맥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 사회학적 신제도론은 합리성이 아니라 정당성을 획득한 모방에 의하여, 서로 다른 형태로 출발한 제도라도 국가나 조직의 경계를 넘어 점차 유사한 형태로 수렴하는 것이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제도 자체에 이미 인간의 표준화된 행동코드가 내재(배태성)되어 있어, 그 틀을 벗어나기 힘들며 개인은 제도를 따르고 유지함으로서 사회에 대한 일체감·소속감을 가짐. 문화적 산물인 제도는 문화의 속성상 현상을 유지하려는 관성을 지니므로 경로의존성을 지닌 현상이라고 본다.

③ (○) 합리적 선택 신제도론에 따르면 제도가 없는 상태를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상태(사회적 딜레마 상태)로 가정하고,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제도가 형성된다고 본다. 제도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쉽게 생성 및 폐지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제도는 불확실성과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거래의 안정성과 교환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④ (×) 사회학적 신제도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는 사회문화적 규범이나 제도적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인간행동은 사회문화적 제약 때문에 합리적 선택에 제약되며, 사회문화적 제도가 인간행위의 인지적 기초를 제공한다고 본다. 인간이나 조직은 사회문화적 가치체계 등 제도적 환경에 부합되도록 행태나 구조를 적응해야만 인간이나 조직의 정당성·생존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답 ③

08 정책의 유형과 사례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구성정책－선거구 조정 ② 분배정책－도로건설 ③ 추출정책－징병제도 ④ 상징정책－임대주택

해설

④ (×) 임대주택건설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서 재분배정책에 해당된다.

답 ④

09 중앙정부의 정책과정 참여자 중 공식적 참여자로만 가장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입법부(의회), 행정부처, 사법부, 지방정부, 대통령
② 대통령, 사법부, 언론, 지방정부, NGO(비정부기구)
③ 대통령, 지방정부, 정당, 사법부, 행정부처
④ 국회의원, 부처장관, 언론, 이익집단, 사법부

해설

언론, NGO(비정부기구), 정당, 이익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 정책과정의 참여자 유형

공식적 참여자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된 참여자.	① 입법부(의회,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② 행정부(행정수반－대통령·수상, 행정기관, 행정관료), ③ 사법부(법원, 법관), ④ 헌법재판소, ⑤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방공무원, 지방행정기관)
비공식적 참여자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자.	① 정당(여당·야당), ② 이익집단·압력단체, ③ 일반국민, 여론, ④ NGO(시민단체), ⑤ 전문가·학자, 정책공동체, ⑥ 언론·매스컴

답 ①

10 국가권력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베버주의(Weberism)는 국가나 정부관료제의 독자성(절대적 자율성)과 지도적·개입적 역할을 강조한다.
② 조합주의는 이익집단 간 경쟁을 통해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③ 마르크스주의(Marxism)는 사회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는데 경제적 부를 소유한 지배계급(자본가계급)이 정치엘리트로 변하게 되어 결국 정부 또는 정책의 기능은 지배계급(자본가 계급)을 위한 봉사수단이라고 본다.
④ 엘리트주의는 정책은 동질적이고 폐쇄적인 엘리트들의 자율적인 가치배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해설

② (×) 이익집단 간 경쟁·갈등과 조정·타협과정을 통한 정책결정은 다원주의의 특징이다. 조합주의는 이익집단들이 단일적·위계적·비경쟁적인 전국규모의 이익대표체계를 형성하고, 일면 국가이익을 대변하면서 그 대가로 특정범주의 이익공동체의 요구를 독점적으로 정책과정에 투입하는 이익대표체계와 관련된다. 조합주의에서는 각 이익집단 간 관계는 비경쟁적이므로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계층적이므로 지도자의 영향력이 크다고 본다.

답 ②

11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와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관한 비교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경찰승진

	구분	이슈네트워크(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
①	참여자 범위	제한적·폐쇄적	광범위·개방적
②	기본가치 목표	공유감 약함	공유감 높음
③	행위자 간 관계	경쟁적·갈등적	의존적·협력적
④	정책산출	정책산출 예측 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가능

해설

①은 반대로 되어 있다. 정책공동체는 특정한 정책분야별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대학교수, 연구원, 공무원, 기자, 국회의원 등)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접촉하면서 형성된 하나의 공동체로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의 인원들로 구성되며, 단순한 이해관계자는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참여자가 제한적·폐쇄적임). 이슈네트워크는 지식을 구비한 일반시민까지 포함한 공통의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대규모의 참여자들을 함께 묶는 지식공유집단으로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이해관계나 전문성을 갖는 개인 및 조직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로서 특정 경계가 없고 개방적이며 참여자가 광범위하다.

답 ①

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이슈망)

구분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 이슈망)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정책 행위자	**광범위하고 개방적**(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제한적·폐쇄적임**
	조직화된 이익집단뿐만 아니라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 전문가, 언론 등 **모든 이해관계자**. 이슈에 따라 수시로 변동.	정부부처, 의회의 상임위원회, 특정 이익집단, 전문가 집단 … **조직화된 행위자에 한정**(조합주의처럼 제도화된 관계에는 이르지 못함)
	상황에 따라 중시되는 자원의 종류나 주도적 행위자도 다르며(**이슈 성격에 따른 이합집산**). 자기이익 극대화(**이해 공유도 낮음**) **자원보유의 격차 존재** 기본관계는 교환관계가 아닌 **자문수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공유하고 협조(**이해 공유도 높음**)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가짐** 기본관계는 **교환관계**
행위자간 관계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관계(경계의 개방성 높음)**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경계의 개방성 낮음)**
	불균등한 권력 보유(권력 편차 심함) 연합형성 전략	**비교적 균등한 권력 보유**(공동의 서비스전달체계의 책임은 수직적 상호의존관계를 지님.)
	경쟁적·갈등적 관계(수평적). 상호의존성 약함	**상호 협력적·의존적 관계(수평적)**. 상호의존성 강함
	zero sum game 또는 negative sum game	**positive sum game**
유형의 구조화	상호작용 빈도 낮음 개별행위자들로서 특별한 구조가 형성되지 않음	빈번한 상호작용 안정된 구조적 관계로 유형화(언어, 가치관, 문화 등의 공유)
정책산출 (정책결정)	**결정과정에서 정책내용의 변동(예측 곤란)** **정책산출과 집행의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음**	**처음 의도한 내용대로의 정책산출(예측 용이)** **정책산출(결정된 정책내용)과 집행의 결과 유사**
국가의 역할	국가는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자이다. 국가기관의 범주에는 행정부, 의회, 사법부 모두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국가라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개별 행위자로 간주**된다.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의 비교

구분	하위정부(철의 삼각)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정책쟁점망, 이슈망)
행위자(actor)	이익집단, 의회 상임위원회, 행정관료	하위정부의 삼자 외에 전문가 추가	정책공동체보다 행위자가 확대됨
안정성	안정적	비교적 안정적	불안정(일시적·유동적)
행위자간 연계 (linkages)	강한 결합(안정적 협력관계)	←→	약한 결합(공개적인 갈등상황)
	동맹관계	의존적·협력적 관계	경쟁적·갈등적 관계
정책네트워크의 경계	명확한 경계(폐쇄성)	←→	희미한 경계(개방성)

12 어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독립 변수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 가장 적절한 분석기법은?

2020 경찰승진

① 회귀분석 ② 분산분석 ③ 전통적 델파이 기법 ④ 정책델파이 기법

해설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형성된 관계의 양태와 크기를 인과관계를 통해 계산하려는 통계학적 분석기법으로 독립변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알아보는 기법이다.

답 ①

13 대형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정책문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정책결정모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혼합모형 ② 쓰레기통모형 ③ 점증모형 ④ 합리모형

해설

쓰레기통모형에서는 의사결정의 4가지 흐름(문제, 해결책, 의사결정 기회, 참여자)이 나타나 있어도 의사결정이 되지 않고 서로 아무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사건(계기)이 발생하면 우연히 하나의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와 한곳에 모여지게 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쓰레기통모형이 상정하는 '응집력이 약한 조직과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는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는 극적인 사건 또는 정치적 사건 등 점화계기(triggering event)가 발생할 때 4가지 요소가 합쳐진다고 본다.

답 ②

14 **정책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대처방안 중 소극적 대처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보수적 결정－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
② 민감도 분석－모형의 패러미터가 불확실할 때 여러가지 가능한 값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
③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환경의 통제－경쟁기관과의 협상이나 타협
④ 분기점 분석－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동등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가정을 도출하는 결과예측 방법

해설

③은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이다.

•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방안

적극적 대처방안	소극적 대처방안
불확실한 것을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만듦. 불확실성의 적극적 해소	불확실성을 주어진 조건으로 보고 그 안에서 결과예측을 시도
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획득 ② 미래예측기법의 활용 : 이론·모형의 개발, 정책실험, 정책델파이, 브레인스토밍(난상토론) ③ 불확실성을 일으키는 상황이나 변수를 통제(환경에 대한 제어와 통제) :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환경을 통제가능한 내생변수화하여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상황자체를 통제 환경과의 협상·흥정, 적응적 흡수(cooptation) ④ 보험 : 최악의 경우를 극복할 능력이 없을 때 보험을 이용해 불확실성에 대비	① 보수적인 접근(최악의 상황을 가정) ② 가외성의 확보(중복적 대비, 복수의 대안준비) ③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 ④ 악조건 가중분석(a fortiori analysis) ⑤ 분기점 분석(break－even analysis) ⑥ 상황의존도분석(contingency analysis of test) ⑦ 한정적 합리성의 확보 ⑧ 휴리스틱 기법(Heuristics) ⑨ 분권화(권한위임) ⑩ 표준화·공식화(※ 적극적 대처방안도 될 수 있음)

답 ③

15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만 가장적절 하게 나열한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표본추출의 대표성 문제, 역사요인, 측정도구요인
② 역사요인, 표본추출의 대표성 문제,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선발요인
③ 회귀인공요인, 크리밍 효과,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역사요인,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④ 역사요인, 회귀인공요인,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측정도구요인

해설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표본추출의 대표성 문제,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크리밍 효과는 외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다. 크리밍 효과의 경우 외적 타당성과 내적 타당성을 모두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기도 한다.

■ 정책평가의 타당성 저해요인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	표본의 무작위배정 및 대표성 관련요인	선발(선정)요인	외재적 요인
		상실(탈락)요인, 회귀인공요인(실험직전반응효과)	내재적 요인
	대상집단의 특성변화	성숙(성장)요인, 사건(역사)요인	
	관찰 및 측정 관련요인	측정수단(측정도구)요인, 측정(검사·조사·시험)요인	
	비교집단 간의 상호작용	오염·확산(누수[누출], 모방, 부자연스런 반응)	
	복합요인 - 단일 요인들의 상호작용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선정과 성숙의 상호작용, 선정과 사건의 상호작용	외재적 요인+내재적 요인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	① 호손효과(실험조작의 반응효과), ② 표본의 대표성 미흡, ③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④ 크리밍 효과·위광 효과(creaming effect), ⑤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실험 전 측정의 반응효과 ; 사전조사문제), ⑥ 상이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과 실험조작의 상호작용		

답 ④

16 **정책변동의 유형 중 정책유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정책평가로부터 얻은 정보가 정책채택 단계에서 다시 활용되는 경우로 정책목표는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② 정책의 기본적 성격이나 정책목표·수단 등이 큰 폭의 변화 없이 모두 그대로 유지되지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부분적 대체나 완만한 변동은 있을 수 있다.
③ 정책대상집단의 범위가 변동된다거나 정책의 수혜수준이 달라지는 경우와 관련이 있다.
④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보조를 그 바로 위 계층의 자녀에게 확대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해설

① (×), ②③ (○)

- 정책유지(maintenance)는 기존 정책의 기본 성격은 유지한 채 기존 정책의 내용·담당조직·예산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며 약간씩만 수정·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정책을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산출이나 정책수단의 일부나 집행절차를 조정하는 수준이다(예 정책수혜 대상자의 수나 수혜액, 수혜자의 자격 등 조정).
- 정책목표는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책승계**(succession)의 일종인 선형승계에 해당된다. 선형승계(대체승계)는 정책목표를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정책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정책수단 자체의 대체, 정책환원, 정책 재도입 등). 정책승계는 정책목표는 변화하지 않는 점에서 정책유지와 유사하지만, 정책수단인 사업, 담당조직, 예산항목 등에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정책유지와는 다르다.

정책유지	목표 유지 예 청년실업해결	적응적(adaptive) 변화	소폭 변경(산출이나 정책수단 일부 조정) 예 청년인턴제 대상 기업 및 지원금액 조정
정책승계		의도적(purposive) 변경	대폭 변경(수단 자체의 변경 포함) 예 청년인턴제를 폐지하고 청년실업자 구직촉진수당제로 전환

④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보조를 그 바로 위 계층의 자녀에게 확대하는 사례는 정책 수혜 대상자의 일부 변경으로 정책유지에 해당된다.

답 ①

17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공무원들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본다.
② 민주주의이론,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인식론적 토대이다.
③ 공익은 시민의 광범한 참여와 담론을 통해 도출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규범적 가치에 관한 이론 제시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들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설

① (○) 정부는 방향잡기(조정)의 역할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service)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Serve, rather than steer.). 즉 정부는 정책과정에서 의제설정, 관련 당사자의 참여,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타협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② (○) 신공공서비스론의 이론적 배경 : 민주적 시티즌십이론(democratic citizenship), 사회공동체(community)모형, 시민사회(civil society)이론, 포스트모더니티이론-담론이론(discourse theory), 조직상의 인도주의(organizational humanism)

③ (○)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본다(The public interest is the aim, not the by-product.). 공익은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는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공익에 대한 담론 중시)이며 행정인은 공익에 대해 집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개념을 구축하여 개인적 선택에 의한 빠른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공유할 수 있는 이해와 책임을 창조해야 한다고 본다. 관료는 시민들이 담론을 통해 공동가치를 표현하고 공익에 대한 집단적 의미로 발전시키는 공적 에너지의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④ (×) 1990년대 후반부터 대두된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지나친 시장주의와 시민의 객체화 등에 대한 대안적 이론으로서, 정부의 소유주인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며 기존 이론들이 강조하던 행정의 생산성·효과성 등에 밀려 소홀히 여겨왔던 시민정신, 참여의식, 공익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들을 중시하고 민주주의정신을 새롭게 부활시키고자 하는 규범적 이론이다. 그러나 신공공서비스론이 지향하고자 하는 행정의 규범적 특성과 가치가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행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성·효율성 등의 실천적 또는 수단적 가치의 유지를 위한 상호 관계의 재정립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다. 따라서 행정의 규범적 가치에 관한 이론을 제시했을 뿐, 이러한 가치의 구현에 필요한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답 ④

18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사업구조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서 간의 조정가능성은 증진되지만 부서 내에서의 조정은 어려워진다.
② 수평적 전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업무는 단순해진다.
③ 직무충실(job enrichment)은 수직적 전문화를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④ 매트릭스 조직은 수평적인 팀제와 유사하다.

해설

① (×) 사업구조는 사업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특정 지역에 봉사하거나, 특정 고객에게 봉사할 때 필요한 모든 기능적 직위들이 사업부서 내로 배치된 자기완결적 단위의 조직구조.로서 **사업부서 내 기능 간 조정은 용이하지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부서 간 조정은 곤란하다**.

② (○)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조직 구성원에게 한 가지 주된 업무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단순해진다.

수평적 전문화(업무 종류·성질별 업무의 세분화)	**수직적 전문화**(업무의 책임도·곤란도별 계층의 세분화)
직무의 범위·폭(width) - 담당 직무 범위가 좁을수록 수평적 전문화 정도가 높음	직무의 깊이(depth) - 담당 직무의 깊이가 낮을수록 수직적 전문화 정도가 높음
과업범위의 세분화 정도로서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일만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정도. 수직적 전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구성원의 업무는 단순화 됨.	과업수행방법이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도. 하급자가 권한과 책임 없이 상급자가 결정한 방법대로 과업을 반복하는 경우는 수직적 전문화가 높음. 수직적 전문화가 높으면 각 계층의 업무 범위가 좁고, 조직 전체적 수준에서 조정과 통제력이 강함.
직무확장(job enlargement)과 반대개념	직무충실(job enrichment)과 반대개념

③ (×) 직무충실은 직무의 **수직적·종적 깊이**를 질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으로 권한의 하부위임(분권)과 관련된다. 이는 한 사람이 맞는 수직적 권한의 폭이 깊어지므로 수직적 전문화 수준은 낮아진다.

구 분	직무확대(직무확장 ; job enlargement)	직무충실화(직무풍요화 ; job enrichment)
특징	• 직무분담의 폭인 **수평적·횡적 넓이**를 양적으로 확대 • 한 사람이 **담당한 업무(task)의 수와 다양성** 증가, 세분화된 몇 개의 작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작업이 되도록 직무내용을 재편성하는 것 ⇨ 단조로움의 극복 • 직무 책임도에 차이가 없는 수평적 관계의 직무 추가 • 직무분담의 재편성 ※ 과학적 관리론이 중시하는 전문화·분업이 조직생산성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전략으로 인간관계론자들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Maslow의 욕구이론에 기반을 둠	• 직무의 **수직적·종적 깊이**를 질적으로 심화 • **권한의 하부 위임**, 의사결정권의 확대, **분권화**·참여 보장 • 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환류를 원활하게 하며 직무수행자의 **책임성·자율성 증대** • **평면조직 활용** • QWL(직장생활의 질) 증대 ※ 직무순환·직무확대는 직무의 단조로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구성원에게 적극적 동기 부여를 통한 높은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데는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됨
	Herzberg의 불만·위생요인과 관련	**Herzberg의 만족·동기요인과 관련**
	수평적 전문화(수평적 분업)의 수준을 낮춤	**수직적 전문화(수직적 분업)의 수준을 낮춤**
유사점	• Y이론적 인간관(자아실현욕구 중시) : 능력발전·사기앙양방안, 대내적 민주성 향상방안, 조직목표와 개인목표의 조화, OD의 수단, Argyris의 갈등의 악순환 극복방안	

④ (○) 수평적 팀제와 달리 매트릭스구조는 수직적 구조와 수평적 구조가 결합되어 있다. 매트릭스구조는 기술적 전문성(기능구조의 특성)과 신속한 대응성(사업구조의 특성)이 동시에 강조됨에 따라 등장한 조직구조로서 전통적인 계서적 특성을 갖는 수직적(종적)인 기능구조(직능조직)와 수평적(횡적)인 사업구조(프로젝트조직)를 화학적(물리적으로×)으로 결합시켜 신축성을 확보하도록 한 혼합적·이원적 구조의 상설조직이다.

답 ②

19 **조직 내의 갈등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갈등관리 방안 중 협동(collaboration)은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분명한 승자나 패자가 없다.

② 갈등해소를 위한 경쟁(competition)전략은 신속하고 결단력이 필요한 경우나 구성원들에게 인기 없는 조치를 실행할 경우 사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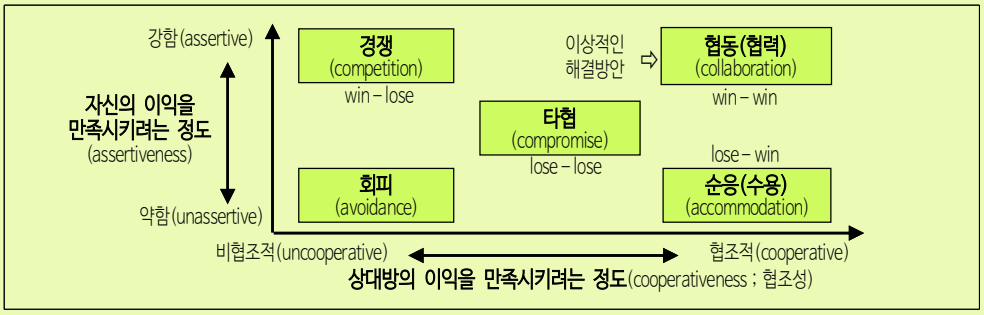
③ 조직이 무사안일에 빠져있을 경우에는 타협(compromise)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④ 조직 내 하위목표를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해설

① (×) 타협(compromise)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타협은 대립된 주장의 부분적 양보로 공동의 결정에 도달하는 것으로 완전한 승자도 완전한 패자도 없다. 타협에 통한 결정은 어느 당사자에게도 이상적이고 최적의 결정은 못되므로 갈등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은 채 갈등을 일시적으로 모면케 하는 잠정적 해소방법이다.

② (○) **토마스와 킬맨(K. Thomas & R. Kilmann)의 대인적 갈등의 관리방안(2차원 갈등해결 모형)**



구분	내용	적용 상황
경쟁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Win-Lose 전략). 위기상황이나 한쪽의 권한이 우위에 있는 경우의 해결책.	신속하고 결단력이 필요한 경우, 인기 없는 조치를 실행할 경우 예 비용 절감
협동(협력)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상적 방법(Win-Win 전략). 각 집단의 구성원이 상대방의 목표를 수용하고, 양 집단 모두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함.	타협이 안 될 때-양쪽 관심사가 너무 중요한 경우, 양쪽의 관여(협력)가 필요한 경우
타협	자신과 상대방 이익의 중간 정도를 만족시킴. 당사자 간 동등한 권력 보유시 해결책으로 갈등 해결을 위해 자신의 목표 일부를 포기(상호 희생). 갈등이 타협으로 해결된 경우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는 없으나, 이것이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에는 동의(Lose-Lose 전략).	복잡한 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결안, 임기응변적 해결이 요구될 경우
회피	자신의 이익이나 상대방의 이익 모두에 무관심(사소한 문제인 경우). 갈등의 존재자체를 부인하고,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거나 시정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	한 문제는 사소하고, 다른 문제는 중요한 경우, 사람들의 생각을 가다듬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순응(수용)	자신의 이익은 희생하면서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킴(Lose-Win 전략). 자신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이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으로,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	논제가 타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우, 다음 논제에 대한 사회적 신용 획득을 위한 경우

③ (×) 조직이 무사안일에 빠져있을 경우 건설적 갈등을 조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공식적·비공식적 의사전달통로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정보 및 권력을 재분배하거나 외부집단의 도전이나 위협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충격요법적 방법을 활용한다.

④ (×) 갈등해소전략으로 공동목표·상위목표에 입각하여 하위목표에 대한 이견 대립을 설득·조정 한다(공동의 적 설정도 유사한 방법). 유사성·공동이익을 강조하고, 상이성을 비판하는 방법이다.

답 ②

20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리더십 효과가 리더와 구성원 관계, 과업구조, 그리고 리더의 직위에서 나오는 권력에 의존한다는 상황론은 피들러(Fiedler)가 개발한 모형이다.
② 거래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에 비해 의사소통이 하향적이며 수직적이다.
③ 리더십 이론은 시기적으로 자질론, 행태론, 상황론, 신속성론의 순서로 전개되었다.
④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의 경로-목표이론에 의하면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해설

④ (×) 허쉬와 블랜차드(P. Hersey & K. Blanchard)의 3차원 리더십 효과성 모형(Tri-dimension Leader Effectiveness Model. 생애주기론, 성장순기론)에 의하면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경로-목표모형(통로-목표모형 : Path-Goal Theory) 하우스와 에반스(R. House & M. Evans)의 이론이다.

답 ④

21 **관료제의 병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번문욕례(red tape)는 쇄신과 발전에 대해 수용적이며 고객과 환경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는 관료 형태를 말한다.
② 국지주의(parochialism)는 한 가지 지식 또는 기술에 대해 훈련 받고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이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은 관료들의 편협한 안목을 의미 하며 직접적인 고객의 특수 이익에 묶여 전체 이익을 망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④ 할거주의(sectionalism)는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부서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편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① (×) 번문욕례(繁文縟禮 ; Red Tape)·형식주의는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형식·의례·관례·규칙·절차를 중시하는 태도로서 쇄신과 발전에 대해 부정적이고 고객과 환경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② (×)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에 대한 내용이다.
③ (×) 국지주의(parochialism)에 대한 설명이다.

답 ④

22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 심의회를 둔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이나 정원 운영은 신축적이기 때문에 총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충원하고, 직원의 임용 시험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담당한다.
④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 간의 전보, 개인별 상여금 차등 지급 등이 가능하다.

해설

실제 출제된 문제는 ②③번 문항이 '책임운영기관의'로 출제되었으나 기관 유형을 정확히 구별한 지문이어야 하므로 '소속책임운영기관의'로 바꿔 표기하였음.
① (○)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중앙행정기관장 소속) : **사업성과 평가**, 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중앙책임운영기관장 소속) : **사업성과 평가**, 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 소속) :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② (×)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총리령·부령으로 정한다. 직급별 정원은 소속장관 승인을 얻어 기본운영규정에 규정한다.
③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기관장의 임용)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동법 제19조(임용시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한다.
④ (○) • 동법 제20조(기관 간 인사교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轉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동법 제25조(상여금의 지급) 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답 ②

23 **거시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거래비용이론은 거래비용이 높아지면 기업 내 위계조직 설립이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② 구조적 상황이론에서는 조직이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면, 효과적인 조직설계 및 관리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주도적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그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로 본다.
④ 대리인이론에서는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평가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 제도를 강조한다.

해설

① (×) 거래비용이 높아지면 기업 내 위계조직 설립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거래비용(시장을 통한 계약관계의 형성 및 집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관료제적 조정비용(조직 내부적으로 합리성 제고, 기회주의 희석, 불확실성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크면 거래의 내부화(조직통합-수직결합)가 효과적이고, 관료제적 조정비용이 거래비용보다 크면 외부화가 효과적이다.

┌ 시장에서의 거래비용 > 관료제 내부조정비용 ⇨ 조직통합(거래의 내부화)이 효율적(계층제·위계조직을 통한 운영)
└ 시장에서의 거래비용 < 관료제 내부조정비용 ⇨ 시장거래가 효율적(외부화 전략)

㉠ 내부화 전략(시장거래를 조직 내 통제로 대체. 시장의 실패를 전제) : 시장을 통한 계약관계의 형성 및 집행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과 계층제적 조직이 될 경우의 내부관리비용(관료제적 조정비용)을 비교하여 거래비용이 내부관리비용보다 많은 경우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즉 계층제적 조직이 형성된다고 본다.

㉡ 외부화 전략(조직 내부 활동(통제)을 시장거래로 대체. 조직의 실패를 전제) : 조직(계층제)이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지는 않고 조직내부화가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조직내부화가 시장거래보다 비능률적일 때, 불확실성이 낮아 거래비용이 낮을 때, 내부관리 및 조정비용이 높을 경우에는 시장거래가 더 유리하다고 본다.

답 ①

24 목표관리(MBO)와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MBO의 기본적 구성요소는 목표설정, 참여, 환류이다.
② TQM은 구성원의 참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MBO와 일치한다.
③ TQM은 고객지향적인 관리라는 점에서 MBO와 일치한다.
④ MBO는 인간의 자율 능력을 믿는 자기실현적 인간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해설

③ (×) TQM은 고객지향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MBO는 대내적 차원에 초점을 두며 고객중심행정, 대외적 민주성, 대응성과는 거리가 멀다.

MBO와 TQM

구분	MBO(목표관리)	TQM(총체적 품질관리)
성격	**관리전략적 차원**	**관리철학적 차원**
시계(視界)	**단기적·미시적**	**장기적·거시적**
지향	**내부지향성** - 개인·조직 단위의 내부적 관점에서 목표설정 **목표지향 / 폐쇄적**	**외향적 관점** - 고객과의 관계 중시(고객위주행정) **고객지향 / 개방적**
목표설정	상관과 부하의 합의로 목표설정	고객의 필요에 따라 목표설정
초점	**양적 목표의 달성** **결과[산출] 중시**(성과지향, 목표달성도)	**서비스의 질적 개선** - 투입과 과정의 개선 **과정 지향**(행정서비스의 품질개선)
관리의 중점	**사후적 관리**(평가·환류 중시)	**사전적 관리(예방적 통제 중시)**
산출의 계량화	중시	중시하지 않음
보상방법	**팀워크도 중시하되 개별적 보상이 강함**(개인에게까지 세부적 목표 부여)	**팀 단위 노력에 대한 보상 중시**(총체적 헌신-집단·팀 중심 활동 중시, 개별적 성과급 지급은 팀워크 저해 가능)
유사점	**참여, 팀워크, 협력 중시, 민주적 분권적 관리, Y이론적 관리**	

답 ③

25 균형성과표(BSC)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균형성과표를 정부부문에 적용시키는 경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재무적 관점보다 학습과 성장의 관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② 무형자산에 대한 강조는 성과평가의 시간에 대한 관점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시킨다.
③ 잘 개발된 BSC라 할지라도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전략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전략의 해석지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④ 내부프로세스 관점에서는 통합적인 일처리절차보다 개별부서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일처리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해설

① (×) 정부부문에 BSC 적용시 민간부문과 달리 재무적 관점보다 고객관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정부는 사업을 통한 순익이나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이 아니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므로 정부기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무관점이 아니라 고객관점이다.

② (○) 기존 성과관리는 계량적 측정이 용이한 재무적 성과만 측정·관리했으나 재무적 성과는 과거 지향적 지표로서 지금까지 한 일의 결과만 보여주며 미래지향적 정보나 조직의 당면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하지 못함. 또한 지식정보사회에서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형자산인 재무가치 중심의 성과평가는 순이익 같은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하여 장기적 가치 창조나 미래의 성장을 낳는 무형 및 지적 자산에 대한 투자에 소홀했다. BSC는 재무적 시각뿐 아니라 비재무적 시각의 기업의 성과를 균형 있게 평가하고 나아가 기업의 장기적 전략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조직을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성과관리나 전략적 성과평가시스템이다.

③ (×) 잘 개발된 BSC는 조직구성원에게 조직의 전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주므로 조직전략의 해석지침이 된다. 조직이 구성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성과지표의 형태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BSC는 의사소통도구로서 기능한다.

④ (×) 부프로세스 관점에서는 개별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일처리방식이 아니라, 서비스전달체계와 같이 조직 전체 차원에서 통합적인 일처리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답 ②

26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젊은 사람보다는 직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더욱 중시
② 민주적 공직관에 입각한 공공봉사자로서의 높은 사회적 평가 유지
③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의 생계 안정화
④ 승진, 전보, 훈련 등을 통한 능력발전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

해설
① (×) 신규채용시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한다(연령·학력의 제한).

답 ①

27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직위분류제는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을 기준으로 공직 분류체계를 형성한다.
② 계급제는 인적자원 활용의 수평적 융통성은 높으나 수직적 융통성은 낮은 편이다.
③ 계급제는 공무원 간의 유대의식이 높아 협력을 통한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직위분류제는 조직계획의 단기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해설
① (×) 직위분류제는 공무원 개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직무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 공직분류체계이다. 학력·경력·자격·능력과 같은 공무원이 가지는 개인적 특성(rank-in-person)을 기준으로 유사한 개인의 특성을 가진 공무원을 하나의 범주나 집단으로 구분하여 계급을 형성하는 공직 분류체계는 계급제이다.
② (○) 계급제는 인적 자원 활용에 있어서 전직·전보 등 수평적 이동(배치전환)이 용이(수평적 융통성 높음)하지만, 계급 간 승진이 곤란하여 수직적 이동의 경직성이 높다(수직적 융통성 낮음).
③ (○) 계급제의 경우 공무원의 직업적 연대의식과 일체감을 높이기 때문에 구성원 간 상호의존성이 강화되고 협력을 통한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
④ (○) 특정 직위의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인물의 적합성을 강조하므로, 단기적 직무수행능력을 중시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장기적 발전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중시하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은 곤란하다.

답 ①

28 **현행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예외적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④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해설
① (×) 인사청문회는 청문 대상에 따라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 원칙 공개, 예외적으로 법정 사유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인사청문회법 제14조).
③ (×)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인사청문 대상

구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		소관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국회의 동의 필요	국회에서 선출	
대법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3인	헌법재판관 6인(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중앙선관위	☑ 중앙선관위원장(x)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6인(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행정부	국무총리 감사원장 ☑ 감사위원(x)		국무위원(각부 장관), 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공정거래위·금융위·국가인권위 위원장, 합동참모의장, 특별감찰관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x),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x)
기타			한국은행 총재, 한국방송공사 사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9명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
* 중앙선관위 위원 : 9명의 선관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 3인은 대통령이 임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호선(互選 : 위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뽑음)하며 청문대상이 아님.

답 ④

29 **개방형 직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정실에 의한 자의적 인사의 우려가 있다.
② 재직자의 능력발전이나 승진 및 경력발전 기회의 제약으로 재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③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일반행정가를 육성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④ 중앙행정기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① (○) 임용권자가 공직 외부에서 선거참모, 대학후배 등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람을 임용하므로 자의적 정실인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② (○) 내부승진 기회를 감소시켜 승진적체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직무나 직위의 폐지는 감원으로 인한 퇴직으로 이어지므로 재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③ (×) 개방형 직위제도는 전문행정가의 확보와 관련된다.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일반행정가를 육성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은 직업공무원제나 계급제와 같은 폐쇄형 인사제도의 특징이다.
④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은 소속 장관별로 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답 ③

30 근무성적평정에 나타나는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연쇄효과 오류는 평정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평정요소가 다른 평정요소에도 연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② 논리적 오류는 유형화(정형화 집단화)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에 대한 경직된 편견이나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에 의한 오류를 말한다.
③ 총체적 오류는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가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④ 관대화 오류는 상관이 부하와의 인간관계를 고려하여 실제보다 후한 평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② (×)

선입견·편견(personal bias), 고정관념(stereotyping), 상동적(相同的)오류 유형화(類型化 ; 정형화 ; 집단화)	① 평정요소와 관계가 없는 요소 등에 대해 평정자가 갖고 있는 편견·고정관념이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② 피평정자에 대해 그가 속한 사회집단이나 고정관념에 비추어 부정확하게 평정되는 현상. 피평정자들이 같은 부류라고 판단하는 오류이므로 상동적 오류라 함(예 기획실 직원이므로 기획력이 뛰어나다고 평정, 동사무소 직원이므로 업무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평정, 서울대 출신이면 책임감이 높을 것이라는 평정). ③ 집단을 통해 평가자를 간접 평정하는 점에서 평정자를 직접 평정하는 다른 오류와 차이가 있음.
논리적 오류	평정요소 간 논리적 상관관계가 있는 요소를 연관지어 평정. 한 요소의 평정점수가 논리적으로 상관관계에 있는 다른 요소의 평정점수에 영향을 미침. 예 산출량이 많으면 숙련도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 기억력이 높으면 지식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많으면 직무수행태도가 좋다고 판단할 경우.

답 ②

31 공직부패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제도화된 부패－행정체제 내에서 조직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행동규범이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되고, 부패가 일상적으로 만연화 되어 있는 상황을 지칭하는 부패의 유형이다.
② 백색부패－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거나 관료사익을 추구하려는 기도가 없는 선의의 부패로서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관례화된 부패의 유형이다.
③ 흑색부패－하급행정관료들이 낮은 보수를 채우기 위해 생계 유지 차원에서 저지르는 생계형 부패의 유형이다.
④ 회색부패－사회체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부패로서 사회구성원 가운데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의 유형이다.

해설

③ (×) 흑색부패는 사회체제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부정적으로 보고 처벌을 원하며 형법·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관련 법 등에 처벌조항을 둔다. 생계형 부패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낮은 보수를 채우기 위해 생계유지 차원에서 저지르는 부패로 작은 부패(petty corruption)라고도 하며, 이에 대한 방지 방안으로 적정 보수(생계급)의 지급이 필요하다.

답 ③

32 우리나라에서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법률안과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후 공포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법률로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성립하지만 정부의 수입·지출의 권한과 의무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된다.
④ 국회에 발의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기한에 제한이 없으나,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쳐야 한다.

해설

① (×) 법률은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u>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고 공포 절차가 필요 없다.</u>
② (×) 예산은 하나의 행정적 형식이고 법률은 강제성이 강하므로, 예산은 법률보다 하위 효력을 가지지만 예산과 법률이 단순히 상하규범의 일방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예산과 법률은 서로 형식과 대상이 다르므로 성질과 효력을 달리하므로 <u>예산으로 법률을 개폐할 수 없고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u>
③ (○) 따라서 국회의 예산의결로 세출예산이 성립해 있더라도 경비의 지출을 명하는 법률이 없는 경우 정부는 지출할 수 없다.
④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기한에 제한이 없으나,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12월 2일까지) <u>본회의 의결을 완료</u>해야 한다.

답 ③

예산과 법률

구 분	예 산	법 률
제출·제안권자	정부(행정부제출 예산제도)	국회 또는 정부
제출 및 심의 기한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제출, 30일전까지 심의	제한 없음
국회의 심의 범위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 금액의 증액이나 새 비목의 설치 불가	자유로운 수정 가능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효력발생요건 (공포)	국회의 의결로 확정, 공포 절차 필요 없음 행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공고	공포 필요(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 발생)
형 식	예산의 형식	법률의 형식
시간적 효력	1회계연도에 한정된 한시적 효력	폐지 전까지는 계속적 효력
구속력(대인적 효력)	국가기관만 구속	국가기관, 국민 모두 구속
효력범위(지역적 효력)	국내·국외	원칙적으로 국내(국외-특별한 경우)
변경·수정(형식적 효력)	예산으로 법률을 수정할 수 없음	법률로 예산을 수정할 수 없음
관계	① **양자의 관계** : 예산은 하나의 행정적 형식이고 법률은 강제성이 강하므로, **예산은 법률보다 하위 효력**을 가지지만 예산과 법률이 단순히 상하규범의 일방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음. 예산과 법률은 서로 형식과 대상이 다르므로 성질과 효력을 달리함. 따라서 **예산으로 법률을 개폐할 수 없고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 수 없음**. ② **상호구속성** ㉠ **세출예산이 성립해 있더라도 경비의 지출을 명하는 법률이 없는 경우 정부는 지출할 수 없음**. ㉡ **법률이 지출을 명하더라도 지출의 실행을 위한 예산이 없으면 실제 지출행위를 할 수 없음**. ㉢ 국회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법률을 성립시켜 둔 경우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법률에 의해 제한되며 세입 변동이 예측되는 법률의 제정·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입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음. ③ **재정소요 추계** : 재정이 소요되는 법령안 제·개정시 법령안 시행일부터 **5년간**의 재정소요를 추계해야 함.	

33 국가재정법 상 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으로 이루어진다.
④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수 있다.

해설

①② (×) •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u>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u>에 <u>법률로써 설치</u>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제5조(기금의 설치) ① <u>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u>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③ (×) 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적 조세가 아닌 별도의 특정 수입 또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확보한다.
④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이 가능하다.
•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 · 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한다(각 호 생략).

답 ④

34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지출통제예산은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 통제하는 예산이다.
② 통합예산(통합재정)제도는 국가예산의 세입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여 재정 건전성을 판단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해설

① (×) 지출통제예산(expenditure control budget)은 구체적 지출항목을 없애고 지출을 총액으로만 통제하는 제도로서,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의 총액만 정해 주면 각 부처는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 항목에 대한 지출을 재량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제도로서 의회는 사전에 구체적 항목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하므로 재정민주주의가 저해될 수 있다.
② (×) 통합예산(통합재정)은 예산·기금간의 전출입 등 내부거래와 국채발행, 채무상환 등 수지차 보전을 위한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계 개념의 세입과 세출 즉,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와 재정수지를 분석한다.
③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④ (×) 조세지출예산(TEB ; Tax Expenditure Budget)은 조세감면(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에 밝히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행정부에 일임되어 있던 조세감면의 집행을 국회 차원에서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답 ③

35 **예산제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목표관리 예산제도(MBO)의 도입 취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하는데 있다.
② 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③ 계획예산제도(PPBS)는 모든 사업이 목표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부처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다.
④ 성과주의예산제도(PBS)는 예산배정 과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지 않아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할 수 없다.

해설

① (×)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하는 예산제도는 영기준예산제도(ZBB)이다. MBO는 중장기계획보다는 확정된 사업의 충실한 집행에 관심을 두고 행정에 대한 분권적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미국의 경우 존슨(Jhonson) 대통령 때(1965년) 연방정부 예산제도로 도입했던 PPBS가 정책결정이 고도로 집권화되고 환산 및 분석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문제를 초래하면서 1973년 닉슨(Nixon) 대통령이 PPBS 대신 MBO를 연방정부 예산제도로 도입하였다.
② (×)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계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 계획수립(planning)과 단기적 예산편성(budgeting)을 프로그래밍(programming)을 매개로 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행하려는 계획지향적 예산제도이다. 여기서 프로그래밍(programming, 사업계획·실시계획)은 사업구조(program structure)와 사업재정계획으로 구성된다. 사업구조는 사업범주(program category ; 대분류) ⇨ 하위사업(program sub-category ; 중분류) ⇨ 사업요소(program element ; 단위사업)으로 세분된다. 사업재정계획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연도별 소요예산과 산출을 기록한 도표형식의 문서로 연차별 소요자금과 프로그램 규모 및 기대 효과를 제시하는 중장기재정계획서로 보통 5년의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작성된다.
-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하여 전회계년도 예산에 기준을 두지 않고, 조직의 모든 사업 활동에 대하여 영기준에서 재평가하여 효과성과 효율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활동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③ (○) 계획예산제도(PPBS)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사업들을 결합해 예산을 배분하므로 예산확보를 위한 경쟁이 정부조직 간이 아닌 사업 간에 이뤄지고 부서별 자원배분이 아닌 부서의 경계를 초월한 정책 또는 프로그램별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져 자원배분을 합리화한다.
④ (×)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예산서에 사업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고 활동별로 재원이 배분되며 배분과정에서 필요한 사업량이 제시되고 사업이 구체적으로 완성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예산(재원)과 사업을 직접 연결시킨다.

답 ③

36 **예산집행의 통제와 신축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계속비는 경비총액과 연부액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매년 연부액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②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이다.
③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① (×)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원칙 5년, 예외 10년 이내)을 요하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이다. 계속비는 장기 계속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전체 사업경비에 대해 잠정적 의결을 얻은 것이므로 매년의 연부액은 별도로 전년도에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이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명시이월 (明示移越)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가능. ㉡ 국회의 사전 승인을 요하며 이월된 명시이월비는 다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재이월) 가능.
사고이월 (事故移越)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국회의 사전 승인을 요하지 않으며 사고이월한 경비는 다시 다음 연도로 재이월할 수 없음.

구 분	사전예측	예산형식에 포함	국회의 사전승인	재이월	사용 사례	공통점
명시이월	사전예측 가능	○	필요	가능(사고이월)	적음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의 예외
사고이월	불가피한 사유	×	불필요(사전의결원칙의 예외)	금지	많음	

③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승인을 얻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다시 산하 재무관(부속기관·하급기관)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을 재배정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7조(예산의 재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④ (×) 예산의 전용은 국회의 사전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답 ③

37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시 자산의 증가는 기록하되 비용이나 부채는 기록하지 않는다.
② 산출물에 대한 원가 산정이 가능하므로 분권화된 조직의 자율과 책임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③ 자의적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에 용이하다.
④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것으로 자산, 부채, 수입, 지출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회계기법이다.

해설

① (×) 발생주의는 복식부기 회계방식을 활용하므로 채권 발행시 자산의 증가를 차변(좌측)에 기록하고 동시에 부채의 증가를 대변(우측)에 기록한다. 또한 채권 발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 경우 비용 발생을 차변에, 비용지급에 따른 자산 감소를 대변에 기록한다.
② (○) 산출에 대한 정확한 원가 산정을 통해 부문별 성과측정이 가능하므로 분권화된 조직의 자율과 책임을 구현할 수 있다.
③ (×) 현금주의는 자산이나 부채 등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자산이나 부채 평가시 발생하는 주관적 판단이 배제되어 발생주의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가 용이하다. 반면 발생주의는 회계담당자의 주관성 개입(예 자산평가·감가상각의 주관성, 채권·채무의 자의적 추정)으로 인한 정보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④ (×) '수입, 지출' ⇨ '수익, 비용'
발생주의는 복식부기와 함께 사용하므로 자산, 부채, 자본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아닌, 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여 기록하므로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수입과 지출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므로 현금의 유입과 유출시 기록하는 현금주의에서 정확히 인식한다. 세입·세출에 대한 통제가 용이한 것이 현금주의의 장점인 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 **수입·지출 ⇨ 현금흐름(현금유입-수입, 현금유출-지출)과 관련되며 현금주의에서 파악 용이**-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오는 수입과 현금이 나가는 지출 시점에서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
- **수익·비용 ⇨ 거래의 발생과 관련되며 발생주의에서 파악 용이**. 발생주의는 실제 현금의 수입·지출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수입과 지출이 발생(수익·비용 발생, 채권·채무 발생)한 시점에서 인식. 따라서 발생주의는 현금의 유입(수입)·유출(지출)의 정확한 파악 곤란, 수익·비용 파악은 용이.

답 ②

38 옴부즈맨(Ombudsman)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②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에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옴부즈맨 제도의 시초이다.
④ 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해설

③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김영삼 정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옴부즈맨 제도의 시초로 본다.
- 고충민원처리제도 연혁 : 1994년(김영삼 정부) 국무총리 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 2005년(노무현 정부) 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영에 관한 법률」 제정.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 ⇨ 2008.2.29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 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폐지

답 ③

39 행정개혁에 관한 저항의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행정수요의 변동
② 관료나 이해관계자의 반발
③ 개혁내용의 불확실성
④ 개혁대상자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결여

해설

① (×) 행정수요의 변동은 행정개혁의 계기·촉진요인이다.

답 ①

행정개혁의 계기(필요성·동기·촉진요인),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발생원인

행정개혁의 계기(필요성·동기·촉진요인)

① **행정환경의 변화** : 국제화·세계화·개방화, 경영화, 지방화, 민주화, 정보화 등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국제적 환경의 변화. 예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 개방화 국제화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② **새로운 정치이념의 등장** : 최고관리층의 정치이념이나 기본정책의 변화가 행정체제의 변화를 초래.
③ **정치적 변혁(정권교체 등)의 발생** :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나 각종 압력단체·여론·국회 등의 외부의 요구로 인한 행정의 과거와는 다른 가치의 지향, 권력투쟁이나 행정기관 내부 또는 기관 간의 긴장·대립의 격화 등.
④ **행정의 비능률·비효율 제거** : 불필요한 행정기능의 중복, 예산의 낭비, 사무배분의 비합리성, 과다팽창된 조직 등을 정비 필요성이 증대되면 행정개혁이 나타남.
⑤ **새로운 과학기술 도입** :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과 행정의 전문화·합리화 촉진.
⑥ **조직 확대 경향과 관료이익의 추구** : 관료의 권한·영향력의 확대, 예산·인원의 경쟁적 팽창, 고위직의 증설 등 일련의 관료이익의 추구도 개혁의 동인(動因)이 됨.
⑦ **사회문제의 변화에 따른 정부 역할 및 행정수요의 변동** :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정부 역할이 변화되고 새로운 행정수요·행정문제에 대처해야 하므로 행정개혁 필요.
⑧ **기타 : 행정관리기술 발전, 인구·고객구조 변화, 시민의 참여욕구 증대, 압력집단의 정부업무 축소 요구.**

■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발생원인

① **기득권의 침해(이익 침해)** : 기득권을 가진 관료나 이익집단·이익당사자는 개혁에 의한 기득권 상실·손실을 우려. 이들 간 강력한 제휴 및 연합관계에 의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고객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나 관련 행정기관의 소멸·축소에 반발.

② **관료의 저항**

㉠ 타성(惰性)으로 인한 저항(관료제의 보수적·현상유지적 경향과 변동에 저항하는 자기방어의식)
㉡ 새롭게 적응해야 할 재교육의 부담, 새로운 상황에의 불안감
㉢ 자신의 업적에 대한 책임추궁으로 여길 때, 자신의 과거의 행동의 정통성이 상실될 때
㉣ 피개혁자의 능력부족(새로운 업무처리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전문지식·기술의 결여는 저항유발)
㉤ 개혁추진자의 권위·신망이나 정치적 리더십 부족, 개혁성과에 대한 불신
㉥ 집단 간 갈등대립 등의 정치적 요인, 의사전달의 미흡
㉦ 개혁대상자가 소속된 비공식집단의 규범·관례와 개혁의 부조화, 비공식적 인간관계와의 부조화

③ **조직 차원의 저항** : 조직의 동태적 보수주의(항구성), 타 조직과 다르다는 조직의 특수성(uniqueness)

④ **개혁내용·전략의 문제** : ㉠ 개혁내용의 불명확성, 개혁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 개혁추진방법의 부적합성, 강압적 개혁 추진이나 참여의 봉쇄, ㉢ 소망스럽지 않은 개혁정책 내용에 대한 불만, 개혁원칙·정당성의 결여, ㉣ 권위주의에 입각한 개혁과정, 비공개적 개혁추진이나 개혁정보의 부족(개혁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성을 띠거나 경직된 문화를 가진 경우, 조직학습이 결여된 경우 반발·무관심을 유발), ㉥ 지나치게 급진적·전면적인 개혁 추진

40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권한(기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경찰승진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③ 선결처분
④ 예산의 의결 및 결산의 승인

해설

③ (×)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지방의회의 권한(열기주의로 규정)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개괄주의로 규정)
의결권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예산의 심의·확정 ③ 결산의 승인 ④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⑤ 기금의 설치·운용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⑧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⑨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⑪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① **통할·대표권** ② **사무의 관리·집행권** ③ **사무위임권** ④ **소속직원 임면 및 지휘·감독권** ⑤ **지도·감독권** ⑥ **규칙 제정권** ⑦ **재정에 관한 권한** : 예산편성권과 집행권 및 지방채 발행권 등. ⑧ **기관·시설 설치권** ⑨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 : 의회 출석·진술권, 임시회 소집 요구권, 의안 발의권, 예산안 발의권, 의회 부의 안건의 공고권, 조례공포권(이송 20일 이내), 재의요구 및 제소권, 선결처분권,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권.** *cf) 자치단체장은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 소집은 지방의회의 사무처장(광역의회)나 사무국장·사무과장(기초의회)이 한다.
행정 감시권	①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권** ② **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 ③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및 출석·답변 요구권** ④ **의견표시권** : 자치단체 폐치·분합이나 명칭·구역 변경시 주민투표를 안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자율권	① **내부조직권** : 의장단 구성, 위원회 설치(조례로 설치), 위원회 위원 선임, 사무조직의 설치. ② **의사(議事)자율권** : 의회규칙 제정권, 개회·폐회·휴회 결정, 회의의 공개 금지 결정. ③ **의회경찰권** : 회의장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 명령 등 ④ **의원신분에 관한 권한** : 의장·부의장·임시의장 등 선거, 의장·부의장 불신임의결권, 의원의 자격심사권·사직허가권, 의원에 대한 징계권(경고·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제명)	

답 ③